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30
----------	------

제출연월일 : 2015. 4. .

제 출 자 : 오수봉 의원

1. 제정이유

-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 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입법예고 결과 2015. 1.22 ~ 2. 2.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2015. 2.17 ~ 3. 6. 기업지원과 ‘붙임 참조’

9. 기타 참고사항

10. 관련부서 : 경기도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바. 그 밖의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지역경제업무·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이하“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2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지원) 시장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중전의 하남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하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하남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하남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보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중전의 「하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하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계법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2012.4.15.]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